

국표원-소비자원, 위해제품 온라인 유통 차단한다

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(2021. 10. 12.)



OECD 회원국과 함께 제품안전 온라인 청소활동(Online Sweep)을 실시할 예정으로, 10.12.~10.20. 기간 동안 가전제품, 장난감 등 7개 분야를 집중 점검한다.

-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이 OECD 제품 안전 인식 캠페인 주간*을 맞아 위해(危害)제품의 온라인 유통을 차단하는 ‘온라인 청소활동(Online Sweep)’을 실시
 - 온라인 청소활동은 온라인쇼핑몰(통신판매중개업자) 판매 제품 중 리콜제품·불법불량제품 등 위해제품을 조사·적발하고 판매를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의미
- OECD(경제협력개발기구)는 회원국과 함께 2014년부터 매년 소비자 안전인식 개선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, 올해는 ‘제품 안전 온라인 청소’ 활동을 실시
- 최근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온라인 제품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위해제품 유통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
 - 지난 3년간(2018~2020년) 소비자원에 접수된 온라인 위해물품 거래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총 64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
 - 온라인 몰 모니터링을 강화중이며, 연간 10만건 이 넘는 위해제품을 감시·차단
 -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가전제품, 장난감 등 OECD에서 선정한 7개 분야* 제품군에 대한 온라인 청소활동을 10.12.~10.20.까지 집중 실시
 - * ①장난감/게임 제품, ②가전제품, ③생활용품, ④스포츠/레저용품, ⑤의류, ⑥어린이/유아용품, ⑦IoT 제품
 - 한국제품안전관리원, 6개 소비자단체 등 180여 명의 모니터링 요원과 함께 제품안전법령을 위반한 리콜제품, 불법불량제품을 집중적으로 적발하고 해당 제품 판매를 차단할 계획
- [6개 소비자단체] ① 녹색소비자연대, ② 소비자공익네트워크, ③ 소비자교육중앙회, ④ 소비자시민모임, ⑤ 한국생활안전연합, ⑥ 한국소비자연맹
- 국표원은 지속적으로 안전성조사를 확대하고,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도입 매장(78개사, 22만개)에 불법제품 정보를 신속히 공유할 예정
 - 소비자원은 국내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(네이버, 11번가, 인터파크, 쿠팡 등)와 ‘자율제품안전협약’을 체결(‘21.4~)하여 사업자의 선제적·자발적 위해제품 관리 체계를 강화